

 해양수산부		<b>보 도 자 료</b>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8. 23.(월)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항만정책과	담당 자	• 과장 남재현, 사무관 허서영, 주무관 박성균 • ☎ (044)200-5910, 5920, 5921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24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 - 8월 24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24일(목)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운영 해오고 있다.

\* 화물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주차장, 숙박 등 이용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항만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실적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 하여 안정적인 사업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는 한편, 전국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나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1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장규정 신설(안 제11조)

-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기한의 연장 규정은 있으나 착수시기의 연장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불편 초래

\*\* 기한 내 미착수 시 법 제8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처분가능

### ②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임대료 징수규정 신설(안 제18조)

- 비관리청이 전용의 토지·항만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대할 경우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③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전담기관 지정·위탁(안 제27조)

- 대통령령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④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안 제69조)

-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입·수출액 실적기준을 **당해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진입장벽 완화

\* (현행) 관할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목적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인 자

### ⑤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7조)

-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참고 2 | 항만배후단지 전경(참고사진)

